

2 이슈



정부의 의대생 유급 완화 방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의대 교원들은 경희의료원의 경영악화도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손보민 기자)

의대 교원 “의대생 유급 방지책 비현실적” 의료원 전공의 지원 0명 ‘의료공백 필연’

김윤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최고훈 기자 cgh99915@khu.ac.kr

의료공백이 6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현재, 우리학교 의대 교수를 만나 의대와 병원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책이 비현실적이고, 전공의 이탈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경희의료원의 의료공백 사태도 필연이라고 보았다

정부의 유급 완화 방안,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유급 현실화되나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수업일수 조정(2주 이내 감축 운영) ▲탄력적 수업 운영(야간·원격 수업) ▲학년제 전환 ▲1 학점제 도입(성적 평가가 완료되

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ncomplete)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다학기제 운영 등의 방법들을 의과대학에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학교 교수들은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수업 시간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1년 30주 수업을 들어야 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2주를 제외하면 최소 28주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28주 차 수업 내용을 9월부터 시작해 모두 듣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름을 요구한 A 교수는 “방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월 정도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간상 어떤 방법을 써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과대학 교수회의 회장 김우식 교수는 이미 학칙상 개정 절차에서 가이드라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대의 경우,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주임교수들의 회의가 필요하다”

며 “지난주 주임교수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2024년도에 한해 학장이 진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에 의대 교수님들이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과대학 행정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을 전달받진 못했다”고 밝혔다.

수업 시간 외에도 학칙상 ‘가이드라인’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년제로의 전환과 1 학점 도입 등 교육부가 제안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학칙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자체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A 교수는 학칙을 수정하기엔 지금 너무 늦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학칙을 개정하려면 6개월 내지 1년 전에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 교수는 “교육부는 유급을 어떻게든 방지하라고 하고, 이것이 학칙에 어긋나도 알아서 책임지라는 무책임한 상황 속에서 총장, 의과대학 학장, 교수들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지원자 ‘0명’ 복귀자는 전체 인원의 7% 전문의 이탈 현상도

병원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황은 악화일로다. 경희의료원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했고 이를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장했음에도 지원자가 0명이었다. 또한 전반기 사직을 결정한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경희의료원은 이들의 사직 수리를 처리했다. 김 교수는 “2월 중순 이후 사표를 제출한 비정규직 의사 노동자인 전공의가 사표를 제출했고, 7월에 경희대병원이 수리했다”며 “이후 진행된 추가 전공의 모집에 응시한 전공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육 특성상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일 수밖에 없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졸업생 3058명이 수련해야 할 대학병원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매년 정해진 수의 의사가 레지던트 상위 과정을 밟아야 원

활하게 병원이 돌아간다. 톱니바퀴처럼 위아래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사직을 이어가고, 의과대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온 전공의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수들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미복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A 교수는 전공의 인식 변화로 인한 병원의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 내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의 붕괴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교수도 같은 의견이다. “경희의료원의 의료 공백을 막을 방법은 전공의 복귀밖에 없다”며 “당직 전문의나 임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 의료 공백을 막을 순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해 들었던 B 교수는 “전공의를 포기하고 개원 준비를 하는 실정이다”라며 “해당과 당직의로 취직해 내년에 복귀할 전공의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8월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주최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긴급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는 지원자가 몰려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 8월 3일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개원 준비 설명회에서는 정원을 넘긴 400명이 참석하는 등 사직 전공의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전공의 이탈은 전문의 이탈로도 이어졌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들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지점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A 교수는 “전공의가 없어서 젊은 교수들은 거의 이탈에 한 번꼴로, 나이든 교수들은 3일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문의들이 나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임시 유예’를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톱니바퀴 식 교육체계’가 그 이유였다. 현재 의과대학 1학년의 유급과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으로 2025년 1학년 정원이 기존 정원의 2배가 되어버리면, 그 인원을 의과대학이 감당할 수 없다. 이에 내년도 신입생을 아예 뽑지 않는 안이 그의 의견이다.

A 교수는 “신입생을 안 뽑으면 1년간 시끄럽겠지만, 신입생을 뽑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다”며 “신입생을 뽑으면 14년 동안 이어지는 어긋난 수업과 실습을 누가 감당하냐”고 말했다. 반면에 입학처는 “의대 임시 유예와 관련된 이야기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